

벨기에의 電氣通信政策 動向

세계각국의 전기통신자유화 추세와 더불어 점차 전기통신개방이 주요논의점이 되고 있는 이즈음, 그동안 계속 전기통신의 독점을 주장해 온 국가중의 하나가 벨기에라 하겠다.

아직까지도 그 방침에는 별 변동이 없는 듯 하지만 디지털화의 우수성과 그로 인한 ISDN에서의 앞서나갈 가능성등을 볼 때 유럽내에서의 전체적인 정책과 고립되어서 나아갈 수만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벨기에의 전기통신정책의 최근동향에 대해 본고에서는 살펴보았다.

I. 概 要

벨기에의 전기통신은 일반에게 Regie 로 알려진 RTT (Régie des Télégraphes et des Téléphones)가 관장하고 있다. 이 기관은 1930년 의회법 (Act of Parliament)에 의해 설립된 이후 전화, 텔렉스, 이동체통신을 비롯한 여타의 통신분야를 관리해 오고 있어 이론상으로는 정부규제로부터 벗어난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즉 1930년 전에는 전신·전화서비스의 제공은 정부기관인 ATT (the Administration des Télégraphes et Téléphones)가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ATT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은 완전한 것이 못되었던 한편, 1930년 7월 19일 RTT가 설립되면서, 전신과 전화라는 제한된 영역에서의 절대적인 독점이 인정됨으로써 독점이라는 근본체제에는 별 변화가 없었으며, 또한 사실상으로는 여전히 상당한 국가규제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의회의 경우 사후통제를 수행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II. 獨占의 根本原因

벨기에의 경우, 바로 위에 인접하고 있는 네덜란드와는 대조적으로 폐쇄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은 전기통신의 자유화가 그들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즉, 네덜란드의 경우는 새로운 전기통신구조가 오히려 경제를 촉진시키리라 기대하는 반면, 벨기에는 그와같은 대규모의 개혁은 실업률증가를 초래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한층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정부소식통에 의하면 그들 역시 새로운 국가전기통신기업에 의한 실업현상을 인정하기는 하면서도 보다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 까닭은, 새로운 서비스기업으로부터 오히려 새로운 일거리로써 더 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벨기에의 견해는 훨씬 부정적으로써, 벨기에의 개방시기는 그에 따라 매우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벨기에는 국가의 전기통신미래향방에 대한 계획을 결정하려 하고 있으나, 국가전기통신행정의 민영화는 이미 확실하게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벨기에는 전기통신자유화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협의(European Community Agreements)를 따르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러한 협의에 조차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가능한한 다수의 서비스를 국가의 전기통신독점규제하에 지속시킬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Ⅲ. EC 지시에의 反對

벨기에의 경우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나름대로의 독점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커다란 테두리내에서의 일괄된 정책노선과 마찰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하겠다.

예컨대 벨기에는 유럽위원회의 요금원칙(tariff principles)설정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서비스에 있어서 앞으로 범유럽경쟁의 선결요결이 될 ONP (Open Network Provision)에의 지시를 부과하는 위원회의 움직임에도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단말기기에 대해서도, 비록 1990년까지는 보다 자유화할 것을 정부측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본 전화기부문이 민영으로 제공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벨기에는 자국에의 단말기기 자격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여, 오히려 로마조약의 자유로운 무역원칙을 깨뜨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RTT 인가절차와 관련한 몇가지 놀라운 통계를 보게 되면, 인가과정에서 45%의 해외단말기가 거부되

는 한편, 벨기에의 숫자는 겨우 11% 만이 거부되었으며 PABXs 에 있어서의 외국의 거부율은 10% 였으나 벨기에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 벨기에의 정책은 상당히 배타적임을 알 수 있다.

IV. 조기 디지털화 및 ISDN 에의 展望

유럽위원회와의 앞서의 마찰부분이 없지 않은 한편, 그나마 유럽위원회가 만족해 할 수 있는 벨기에의 전기통신부분의 한 영역을 들면 통신망의 디지털화이다.

전기통신의 궁극적인 체계화의 목표가 ISDN 이고, 또 그것의 표준화 및 시행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 통신망의 디지털화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유리한 요소라고 하겠다.

〈표 1〉 통신망 디지털화율 프로그램

	디 지 탈 화 율 (%)		
	1988	1990	2000
지 역 내 접 속	15	40	80~85
지 역 간 접 속	1	35	80~85
중 계 교 환	0	33	70~75
가 입 자 회 선 교 환	3	30	60~65

資料 : Eurodata Foundation

〈표 2〉 교환체계에 의한 접속수현황

교 환 시 스템	1986 (%)	1991 (%)
전 자 기 계 방 식	55	27
아 날 로 그	45	40
디 지 탈	0	33

資料 : Eurodata Foundation

〈표 3〉 교환체계 가입자수 현황

교 환 시 스템	1986		1991	
	(단위:백만)	%	(단위:백만)	%
전 자 기 계 방 식	1.88	52	0.99	23.3
아 날 로 그	1.46	40	1.56	36.7
디 지 탈	0.30	8	1.70	40.0
합 계	3.64	100	4.25	100

資料: Eurodata Foundation

벨기에의 간선망(trunk network)의 디지털화는 1970년대에 시작되어, 광섬유를 통한 140 Mbit/s 속도의 통신망을 운용중이며, 극초단파 회선(microwarve links: 34 Mbit/s)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화교환디지털화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 바, 현재는 교환의 20% 정도이나, 1990년까지는 40%로, 그리고 2,000년에는 80%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다.

예컨대 RTT는 1986년 5월, 쉐 디지털통신망 개발을 비롯 대부분의 고도서비스의 열쇠가 되는 CCITT의 신호체계인 No.7을 최초로 시행한 전화서비스제공자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벨기에의 디지털기술의 선진화는, 곧 RTT가 ISDN 기술도입에 있어서도 앞서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RTT가 처음으로 6월에 ISDN 서비스를 실시했을 때에 유럽내의 4번째 국가에 해당되었다(프랑스, 서독, 영국에 이어). 한편, ISDN에 대해서는 수용자측에 있어서도 상당한 회의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왜냐하면 현 단말기기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년내에 다시 유럽표준에 근거한 2단계의 보다 고도의 서비스로의 전이에 대한 대처를 우려한 것이었다.

즉, 이번에 시작된 벨기에의 ISDN 서비스("Aline")는 RTT의 ISDN 계획 제1단계로 '85년부터 시험제공해온 64 kbps 2회선과 16 kbps 1회선의 프랑스 방식에 유사한 규격을 채택한 것으로, 1992년에 실시될 2단계 서비스에서는 범유럽 ISDN 규격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어 제1단계에서 사용하는 기기들은 제2단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도 다 하고 있다는 가능성에 비추어 자국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RTT는 계속적으로 ISDN 추진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VI. 結 語

현재의 국제적인 전기통신체제는 보다 개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그 추세라고 할 수 있으나, 벨기에에는 아직도 독점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고 해서 벨기에에 있어서 뚜렷한 정보처리정책이나 데이터처리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국내의 패킷교환 통신망을 우대하는 정책에 의해 간접적으로 독점상황을 형성하고 있으며, 설비시장에 있어서의 부분독점적인 상황도 아직까지는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벨기에의 경우 유럽이라는 보다 특수한 상황에 속하고 있는 바 유럽의 전체적인 정책과의 마찰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으며, 1992년 EC 통합에 대비하여, 벨기에의 전기통신정책도 다소 탄력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벨기에 自國의 경제적 관점과 그것을 고수하려는 성향과, 유럽이라는 보다 큰 공동체내의 일원으로써의 '개방'이라는 외적인 동향에 대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RA 89 BE 3002 ▨